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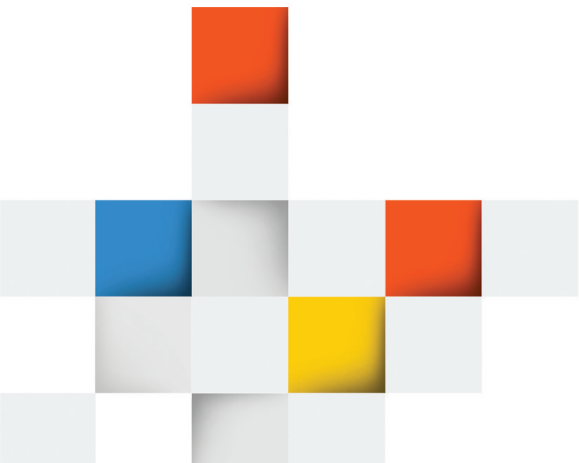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하상응 (서강대학교)

- 투표율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한 하락을 겪다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67.0%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비선거 참여는 202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감소 추세다. 그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이 2023년 다소 증가하였다.
- 정치효능감은 정권의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9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하락 추세에 있다. 한국의 공공 부문 부패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사회통합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때 가능하다. 어느 한 집단이 효율성, 공정성, 합법성, 정당성 등을 이유로 다른 집단에게 더 많은 희생과 양보를 강요한다면 사회통합이 어려워지며, 이는 곧 안정적인 사회의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민주주의 이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자유와 평등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국가에 의해 동등한 개

체로 취급되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쇠퇴와 권위주의로의 회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경제 불평등의 심화, 자유로운 이민에서 비롯된 국가 정체성의 약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야기된 이념 및 정서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통합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민주주의 위기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혹은 이미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평등 혹은 불공정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회의가 증폭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 통계자료, 통계청의 「사회조사」,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등에서 확인되는 여러 정보를 통해 한국 사회의 통합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참여,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정치 상황 인식,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의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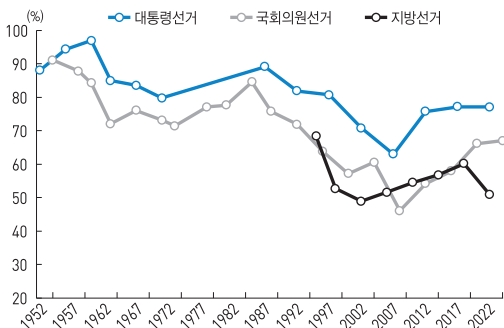
간이 되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 및 부패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선거참여

정치참여는 선거와 같이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참여와 선거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비선거적 정치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민들에게 투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손쉬운 정치참여이다. 선거는 잠재적인 정치적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분쟁 해결을 위한 타협의 수단으로 선거가 사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면 당선된 정치인들의 민주적 정당성이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

[그림 XI-1]은 역대선거의 투표 참여율을 보여준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그림 XI-1] 역대선거 투표율, 1952-2024



주: 1) 투표율=(투표자 수÷등록선거인 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2024.11.검색.

어진 높은 투표율을 제외하고 보면, 투표율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한 하락을 겪다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다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양극화에 따른 정치 협회가 심각한 상황에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67.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66.2%)보다 더 높다.

비선거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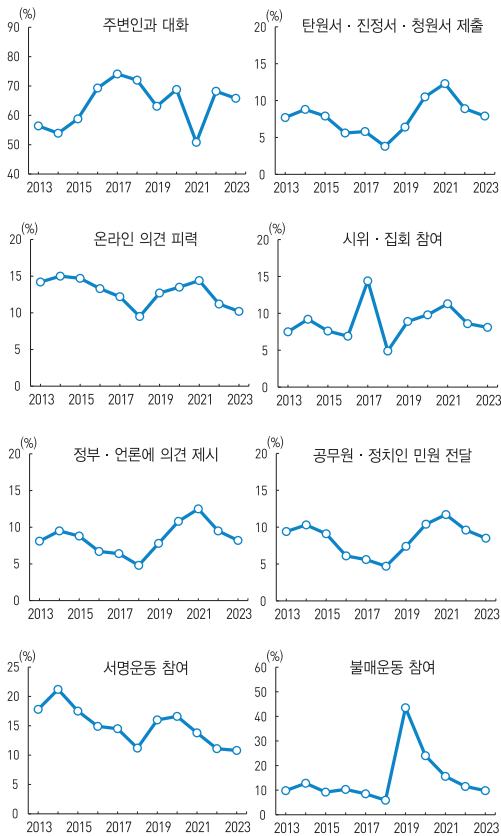
비선거참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선거를 통한 갈등 해소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비선거참여는 헌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선거의 정당성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선거참여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변인과의 정치적 대화, 시위 참여, 서명운동 참여, 공무원에 민원 전달, 언론에 의견 제시 등이 있다.

[그림 XI-2]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관된 추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우선 주변 지인들과의 정치적 대화는 2021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2022년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감소한 대면접촉이

회복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3년에는 그 수준이 전년 대비 조금 하락하였다.

온라인 의견 피력, 정부·언론에 의견 제시, 탄원·진정·청원 제출 및 공무원·정치인에 민원 전달 등 온라인으로 가능한 활동들은 최근 모두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위·집회 참여는 2016~

[그림 XI-2]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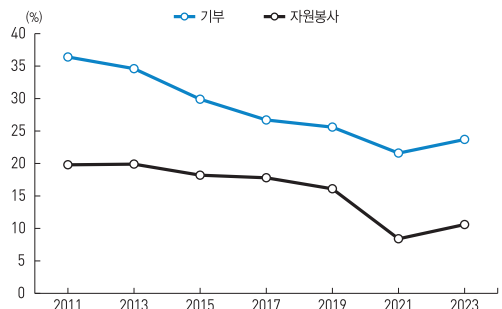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2017년 촛불집회 국면에서 정점을 찍은 후 급감하였고, 이후 2021년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인다.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준 변화도 발견되는데, 불매운동 참여율은 2019년 급격히 증가하여 정점을 찍었고, 이후 2023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XI-3]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1년 약 35%에서 2021년 약 20%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율도 2011년 약 20%에서 2021년 1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이 코로나19 확산기임을 고려해도 자원봉사 참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2023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바뀌어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가 조금 늘었다.

[그림 XI-3]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 2011~2023



주: 1)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참여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정치 상황 인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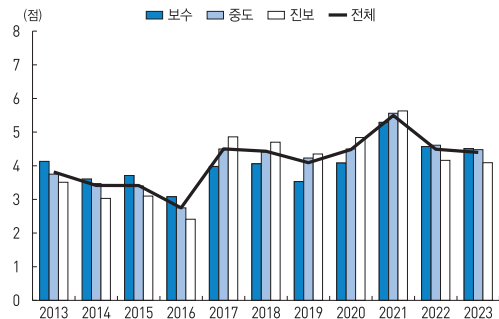
정치참여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현재와 미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 사회통합의 가능성도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우선 시민들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XI-4]는 정치이념(보수, 중도, 진보) 집단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정치이념 성향은 5점 척도(매우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매우 진보)로 물어 본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비교적 짧은 시계열이긴 하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인다. 둘째, 정치 상황 만족도는 응답자의 이념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보수 성향 응답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진보 성향 응답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정치 상황 만족도가 더 높게 형성된다. 이러한

1) 지난해 주요 동향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전망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았으나, 2023년 조사에서 해당 문항이 조사되지 않아 정치 상황 인식(만족도 및 전망) 관련 문항으로 대체해 살펴본다.

추세는 2022년부터 진보 성향 응답자의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흐름이 다시 바뀐다.

[그림 XI-4] 정치이념 성향별 정치 상황 만족도, 2013-2023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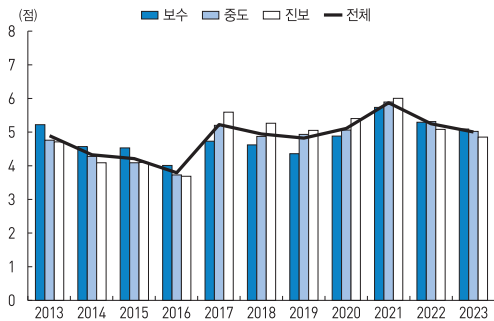
2) 통계치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0~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5]는 5년 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XI-4]에서 확인한 내용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라고 한다면, [그림 XI-5]에서 관찰되는 정보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전망적 평가(prospective evaluation)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응답 패턴은 [그림 XI-4]에서 본 패턴과 유사하다. 보수 정권일 때는 보수적인 응답자가, 진보정권일 때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적으로 높다가 정권 말기로 가면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는데, 코로

나19 상황이었던 2021년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XI-5] 정치이념 성향별 정치 상황 전망, 2013-2023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5년 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나빠질 것이다'부터 '매우 좋아질 것이다'까지 0~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정치권의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치 상황 인식은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정치이념 성향과 정권이 지향하는 정치이념 간 일치 여부에 따라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가 심해지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은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정치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학술적으로는 시민들의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력 차원을 외적효능감(external efficacy)으로, 시민들의 정치 이해력을 내적효능감(internal efficacy)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정치효능감은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맥락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은 선출한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정치효능감이 높은 경우는 시민들과 대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치효능감이 낮은 경우는 시민들과 대표 간의 연결 고리에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림 XI-6]은 정치효능감의 변화 추이를 정치이념 집단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치효능감의 변화 추이에는 뚜렷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치효능감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다시 하강 국면을 겪는다.

둘째, 시민들의 정치효능감이 정권의 변화와 자신의 정치이념에 따라 잘 바뀌지 않는다. 편차는 있지만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일관되게 높은 정치효능감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현상은 진보정권으로 인식

되는 문제인 정부 시기(2017~2021년)뿐 아니라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6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 성향 응답자의 정치효능감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2023년 보수 성향 응답자의 정치효능감이 약간 높아진 현상은 새로운 결과다.

셋째, 보수 성향 응답자와 진보 성향 응답자 간 정치효능감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진보 성향 응답자의 정치효능감은 크게 올랐던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정치효능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들어와서 보수 성향 응답자의 정치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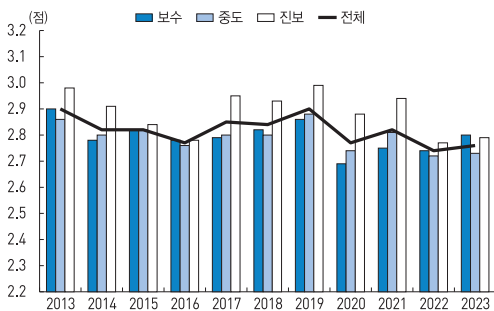
능감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 대비 문제인 정부 시기에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 간 정치효능감의 격차가 현격하게 커진다. 2021년 당시 보수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효능감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념 갈등이 민주주의 제도의 불신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다만 진보와 보수 간 정치효능감의 격차는 2022년 정권이 교체된 후 눈에 띄게 줄어든다.

기관 신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통합은 정치효능감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여러 기관에 대한 신뢰의 함수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사회통합이 원활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관들인 중앙정부(행정부),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 등의 신뢰도 변화 추이와 정치이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다.

[그림 XI-7]은 중앙정부(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 시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낮아지다가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진 2016년 가장 낮은 상태에 이른다. 2017년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중앙정부

[그림 XI-6] 정치이념 성향별 정치효능감,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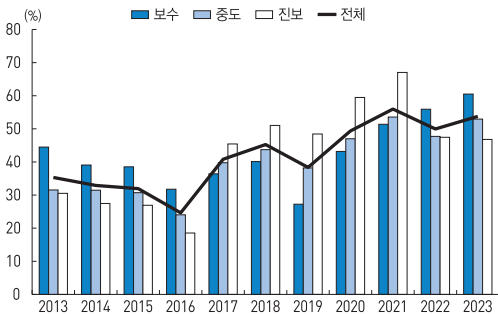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정치효능감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등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를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도록 1~5점으로 재부여한 후 응답자 4개 문항 평균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만 2019년 다시 낮아지다가 2020년부터 상승세를 타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신뢰도가 다시 낮아진다.

[그림 XI-7] 정치이념 성향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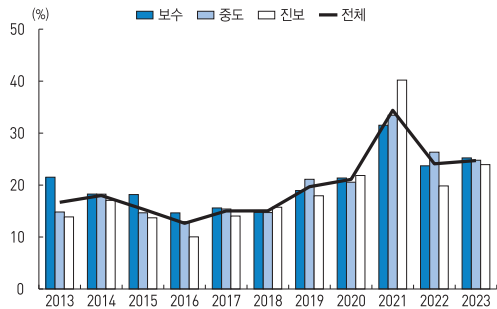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신뢰도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믿는다(약간 믿는다+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정권의 이념 성향과 시민들의 이념 성향 간의 상관관계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 중앙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정확히 반대의 패턴이 나타난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진보 성향 응답자의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보수 성향 응답자의 중앙정부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왜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였는 점이다. 아마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결집효

과가 생겼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최근 이념 집단 간 갈등 양상은 언론과 정치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과장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국회(입법부)에 대한 신뢰의 변화 추이도 중앙정부 신뢰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림 XI-8]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절대적으로 낮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우 40% 이상의 응답자들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반면, 입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 이하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림 XI-8] 정치이념 성향별 국회에 대한 신뢰도,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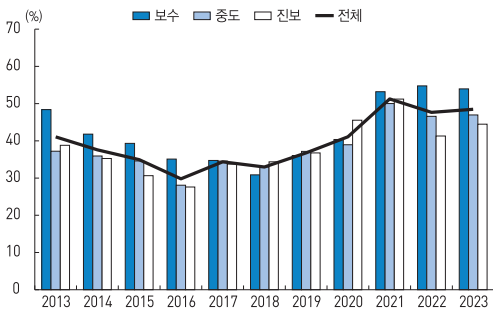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신뢰도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국회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믿는다(약간 믿는다+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19대 국회(2013~2016년)에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는 알려진 바와 다르게 국회

신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1대 국회(2020~2022년)가 들어서면서 달라진다. 2021년 전체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으나 2022년 다시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내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의 진폭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21년에 큰 폭으로 국회 신뢰가 높아진 현상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림 XI-9]는 법원(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체적인 추세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신뢰의 경우와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 시기 법원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낮아졌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오히려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보수 성향 응답자가 진보 성향 응답자에 비해 법원을 신뢰하는 정도가 더 강했으나,

[그림 XI-9] 정치이념 성향별 법원에 대한 신뢰도, 2013-2023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신뢰도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법원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믿는다(약간 믿는다+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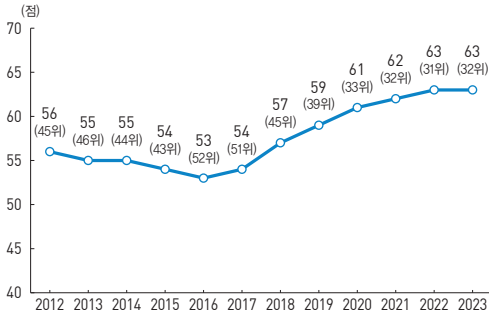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법원 신뢰에 이념 차이가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시기엔 보수 성향 응답자와 진보 성향 응답자 간 법원에 대한 신뢰 차이가 두드러진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높은 신뢰를 보이는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2021년 대비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가 2023년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사법부에 대한 태도도 시민들의 정치이념에 영향을 받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기관 신뢰의 변화 추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적어도 2019년 이후부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세를 타다가 2022년에 꺾이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의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정치이념별 기관 신뢰도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념별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특히 중앙정부(행정부)와 법원(사법부)에 대한 신뢰에서 이념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기관 신뢰는 부패 인식의 함수이기도 하다. [그림 XI-10]을 보면, 한국의 공공 부문 부패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2년 전 세계 180개국 중 45위에서 2023년 현재 32위로 향상되었다. 앞서 확인한 기관 신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패 수준이 개선되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림 XI-10] 부패인식지수, 2012-2023



주: 1)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비즈니스맨과 국가 분석 전문가들이 평가한 180여 개국의 공공 부문 부패 수준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는 0~10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부패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3: Historical Results, 2024*.

맺음말

최근 정치학계에서 가장 빈번히 논의되는 주제는 민주주의 쇠퇴와 권위주의로의 회귀 현상이다. 민주주의의 쇠퇴는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경제 불평등의 심화, 자유로운 이민에서 비롯된 국가 정체성의 약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야기된 이념 및 정서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사회통합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한국 사회의 경우 이민자 유입에 따른 정체성의 위기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경제 불평등과 편향된 미디어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주의는 잠재적인 정치적 갈등을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과정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과정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사회통합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시위·집회 참여, 탄원·진정·청원 제출, 공무원·정치인에 민원 전달, 온라인 의견 피력, 정부·언론에 의견 제시 등이 2022년부터 모두 감소하였다. 대신 지속적으로 줄던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은 2023년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보수 성향의 시민들보다 한국 정치의 현황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그 추세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바뀌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정치효능감은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일관되게 높은 경향을 보인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적어도 2019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2년 이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서는 정권의 이념 성향과 응답자의 이념 성향 간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는 사회통합과 관련한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투표율도 양호하고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양상도 안정적인 수준이며, 정치 상황에 대한 신뢰와 전망도 높은 편이다. 정치효능감과 기관 신



되도 역시 통념과 달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신뢰하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다만 시민들의 이념 성향과 정부가 지향하는 이념 간 일치 여부에 따라 정치 상황 인식과 기관 신뢰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념 양극화 수준보다는 심하지는 않지만,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념 양극화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사회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영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다.